

제35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월16일(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고용노동부
 - 나. 교육부
 - 다. 보건복지부
 - 라. 여성가족부
 - 마. 국토교통부
 - 바. 금융위원회
 - 사. 병무청

상정된 안건

- 1. 업무현황보고(계속) 1
 - 가. 고용노동부
 - 나. 교육부
 - 다. 보건복지부
 - 라. 여성가족부
 - 마. 국토교통부
 - 바. 금융위원회
 - 사. 병무청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부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전체회의 첫 정부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서 여기에 참석하신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7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고로 지난번 2차 회의에서 제일 논의가 됐던 것이 바로 컨트롤타워 문제였고 국무조정실

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회의에 국무조정실의 사회복지정책관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고용노동부
- 나. 교육부
- 다. 보건복지부
- 라. 여성가족부
- 마. 국토교통부
- 바. 금융위원회
- 사. 병무청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좀 몇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년층이 일자리·교육·복지·주거·부채·병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형편이고 청년 1인가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청년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존망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로 심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실업 대책은 물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발표를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업무보고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뭘 개선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청년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은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작년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먼저 청년고용 동향을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 관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매년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실업률은 작년에 9.9%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2.7%로써 작년에 비해 0.7%p 상승하였습니다. 또 일하지도, 교육받지도 않는 이른바 청년 NEET는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 여건 변화입니다.

우선 공급 측면입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인구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몇 년간 특히 청년고용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수요 측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고용구조가 바뀌고 일자리 변동성과 근로자 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등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15개 부처, 60개 사업 총 3조 126억 원의 규모입니다. 직업 훈련·고용장려금·창업지원·고용서비스·직접

일자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형별 규모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이 비율을 5%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 통과를 도와 주신다면 많은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년의 구직 역량 강화와 채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 훈련, 취업 알선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작년 18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진로 지도와 대학 내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대학교 학사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경력 개발 설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잡월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직업관을 새로 꾸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 전공자에 특화된 직업훈련에 역

점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공공 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워크넷은 청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자치단체와 민간과 연계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SNS나 웹툰 등 청년 친화적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고 커피트럭을 만들어 전국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청년정책서포터즈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나갈 정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안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르바이트 일자리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대 핵심 사업을 지속 확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에 대한 지원, 성장유망업종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방안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청년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등 구인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국,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취업 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학일자리센터 확대 등 대학의 직업·진로 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취업 과정에서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직무 체험과 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미래 유망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이에 걸맞은 직

업훈련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일자리 중심의 청년 워크넷에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화·복지 이슈도 담아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우수사례 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청년단체, 청년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인 청년정책허브를 구축하여 청년의 현장 의견을 계속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정부가 주도하는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지양하고 하나라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다음 장은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성기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또 전에 늘 해 오던 일상적인 업무는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보고서고 이 보고는 가능하면 중점적으로 추려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차관께서 국무회의에 장관 대신 참석을 하고 있는 사정으로 김영철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보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실장님,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교육부 기조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청년실업 대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부 업무현황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난을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

습니다.

특히 대학은 창업 인재와 기술의 산실인 만큼 교육부는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청년의 미래를 위한 고견은 향후 교육부의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박성수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대학 창업 활성화 및 학비·주거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진 배경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창업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적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인원이 일부에 불과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저조하며,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기숙사비 편차가 심해 청년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2쪽,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대학생 창업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각 부처별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창업 강좌 확대, 창업 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 창업유망팀을 지원하는 등 창업 도전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창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 기술창업과 대학이 지역 내 창업 거점이 되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쪽, 대학생 학비 및 주거 부담 경감 성과입니

다.

학생 및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재원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하하고 입학금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반값등록금 확대에도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가 저조하며 대내외 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학자금 대출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기숙사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숙사비 인하 및 소외계층 대학생들의 공공기숙사 입사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기숙사 건립 시 주변 임대업자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기숙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의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대학발 실전 창업 붐 조성을 위하여 대학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학원에 특화된 창업선도 모델을 발굴하여 기술창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창업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원 창업을 장려하고, 대학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도록 창업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부처 간 창업 지원 역량을 모아 제2차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올해 중 수립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 국가장학금을 증액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총 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혜자 확대, 단가 인상 등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2018학년도 1학기에 0.05%p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한도 증액 및 상환 기준소득을 상향 조정하여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입학금 실부담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4~5년도에 걸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감축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2022년까지 수용인원 5만 명의 연합기숙사, 공공기숙사 등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숙사 공시항목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요금 인하를 통해 기숙사비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부의 대학생 창업 및 학비·주거 부담 완화 관련 지원정책 예산이 참고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부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들의 고달픔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우리나라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치솟는 등록금, 집값, 취업난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고 있는 소위 3포, N포의 그런 상황에 있다고들 회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점점 희박해져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은 더 많이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어느 특정 부처, 특정 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듯 청년문제 또한 전 부처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청년정책을 보강하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대책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복지부 소관 청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청년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보고드린 이후에 복지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년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입니다.

먼저 청년층의 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판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계층의 차이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대학 진학률, 임금 등의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청년 희망의 상실로 이어져 오늘날 3포, 5포, 7포 등 숫자를 이용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N포세대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청년층의 빈곤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청년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중장년층,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와의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청년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청년층은 특히 사회보험 가입의 안정성, 고용, 주거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로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가구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소득·건강·문화·주거 등을 포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20~30대 청년 세대 중 일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대의 피부양자와 세대원의 건강검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신규 건강검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청년 빈곤층은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빈곤가구 청년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여 청년들은 매달 40만 원씩 5년간 약 1500만 원의 적립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1월부터는 수급가구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남은 가구원을 별도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학생·청년이 본인이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는 해당 지출액을 공제하여 일하는 청년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청년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의 30%까지 청년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교육기관 졸업 후에 복지절벽에 빠지는 청년장애인 등을 위해 복지일 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2만 8000명 중에 약 10%는 18세에 이르러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업·진학 등으로 자립에 성공한 아동은 76%에 불과합니다.

소득·주거 확충 등을 통해서 아동의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의 조기 자립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하고, 후원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자립자금 저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될 아동수당은 전액 저축하여 향후 자립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서 통합자립지원서비스 우수 사례는 적극 벤치마킹하여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이 거주하면서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자립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의 욕구,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보건복지 일자리의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 중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확대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임에도 타 산업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구직 수요가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중 간호사의 경우에도 과중한 업무부담, 병원 내 인권침해 행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서 보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대체 복지인력 지원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폭력 등 위기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을 늘려 나가면서 처우개선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경력 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야간근무 간호사의 휴식시간 보장, 수당 지원,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률자문 등 구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병원 내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최대한 검토하여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권덕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9.9%이고,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년 기준 20%가 넘습니다.

이렇듯 유례없이 높은 청년실업난 속에서 청년 여성의 경우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연령별 고용률을 보시면 30대부터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열악한 고용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취약 청소년 또한 일자리 취약계층으로써 빈곤층 성인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청년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에 척박한 상황이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여성이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조진우 청소년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 자료에 따라 청년여성 및 후기청소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여성과 청소년의 일자리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여성의 열악한 고용조건을 통해 볼 때 청년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청년여성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장 먼저 청년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인 새일센터의 정책 대상을 2030 청년여성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청년여성의 첫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여성내일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출산·육아기 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력이음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진출·입사 초기 단계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리더십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여성 멘토단·멘티단을 구축하여 역량개발 역할모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사회변화에 대응한 청년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3D 프린팅, 빅데이터, 드론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여성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전부터 지정 후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경찰, 노동관서 등을 연계하여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연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등 젠더 폭력에 대해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 근로권익상담실을 운영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NEET 예방을 위한 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비진학·미취업 후기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진로설계 코칭을 강화하고 후기청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CYS-Net를 활용하여 은둔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후 갈 곳 없는 후기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주거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직업훈련 사업인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기업 취업 연계, 청소년 한부모 등 대상특화형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 내용이며 참고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숙진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년의 미래를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기금 및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의 주거여건은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주거불안 등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된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은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에 앞으로 5개년간 추진할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각종 주거지원을 쉽게 알고 정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 김홍진입니다.

공공주택추진단장 진현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입니다.

청년층은 경제여건이 어려워져 주거여건도 전체 가구에 비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도 높은 수준입니다.

1인가구가 많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

로 높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지속하였으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통해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쪽,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청년 주거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청년주택 총 25만 실 및 5만 명 입주 가능한 기숙사의 공급, 둘째 청약통장·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 강화, 셋째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향후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중 청년 대상으로 1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지원주택 20만 호 중 청년 대상으로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 13만 호를 공급하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을 완화해서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매입·전세임대에 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지원 단가 상향 그리고 전세계약 일대일 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형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서 세어하우스형,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공공지원주택 20만 호 중 6만 호(12만 실)를 청년에게 특별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쪽, 대학 기숙사는 교육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지원 그리고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련입니다.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올 6월부터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입 대상과 금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전세 및 월세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상환 방식도 분할상환형을 신설해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5쪽,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청년들이 기존 가구에서 독립하는 경우 주거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이홈 포털 등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정보 그리고 주택자금지원제도, 주택 탐색방법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주거 관련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나 지자체, 대학교, 청년단체 등과 연계해서 대학생 등 청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대학가 주변 전세주택이 부족해서 주택 물색이 어렵고 임대계약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세임대 제공주택 중 계약 만료 등 신규 가능 주택을 전세임대 BANK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임차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에게 주택 물색·계약·입주 등 단계별 필요사항을 일대일로 상담·지원하는 전세계약 일대일 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 공공지원주택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거공간 외에 취업·창업 지원 및 사회적 유대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탄력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청년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과천 주암지구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 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강화해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7쪽의 청년 주거지원 관련 예산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손병석 차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대학생은 경험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으며 재산이 적은 반면에 무한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은 청년·대학생이 현재의 소득·재산이 부족하다는 점에만 집중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대학생이 균등한 금융 이용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학생에게는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도록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설치·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금융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용정보 부족자인 청년·대학생이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대학생의 생활·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금융·소액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채무를 연체한 청년·대학생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고용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권도 취업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의 보고는 전체회의 논의 주제인 청년실업 대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밀접하

게 연관된 주택금융·소액금융과 채무조정 지원을 중심으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입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청년·대학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정책모기지 및 소액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청년·대학생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대학생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상승과 구직기간 장기화라는 장기·구조적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17년 중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대학생의 금융 이용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대학생이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서 고금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이용하여 많은 금융 부담을 지게 되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쪽,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주택금융·소액금융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대학생의 원활한 학업·취업을 위해 교육자금 외에도 저리 주거자금 및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자금 관련,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서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신DTI 산정 시 특례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금융 공급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저리 생활자금 및 고금리 대출의 저리자금 대환 지원을 위해 소액금융인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총 공급한도는 2500억 원으로 18년 중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 등을 통해서 청년층에 저리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을 통

해서 18년 중에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추가 공급하고 19년 이후에는 정부재정 확보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한도 확대, 지원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고 취업준비자금과 비주택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채무조정 지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청년·대학생의 채무조정 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학업·취업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해 상환유예 지원이 강화된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 중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는 14년 중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에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대학생의 연체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의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종합적으로 채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균등상환만 허용되었던 채무조정 후 상환 방식도 다양화하여 청년·대학생의 재기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대학생을 위해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취업컨설팅 및 고용부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취업 후에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대학생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취업컨설팅 프로그램과 민간 금융회사 취업 지원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융교육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대학생의 금융 이해력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고 OECD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청년·대학생이 자신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관

리하고 대출 연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 중이며 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금융교육 외에도 일반 청년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참여·혁신형 교육모델 도입 및 확산을 통해서 청년·대학생이 금융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8년 상반기 중에 주요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각 세부과제들은 18년 중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대학생을 배려하는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대학생을 위한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추진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용범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기찬수 병무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병무청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병무청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태화입니다.

입영동원국장 홍승미입니다.

사회복무국장 권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청년 군복무 관련 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병무청의 임무로부터 병역의무자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임무는 병역판정검사 및 전시 병력동원과 병역의무자 관리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며, 조직은 본청 1관 3국 18개 과와 17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8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216억이며, 병역의무자는 총 774만 80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청년 군복무 관련 제도는 취업맞춤특기병 운영 활성화,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취업맞춤특기병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자 대부분이 자격이나 전공이 없어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없으므로 군복무가 경력단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와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에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병무청, 고용노동부, 각 군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세부역할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모집 인원 및 범위와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많은 의무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역자 채용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전역자

548명 중 284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지난해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인원과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 내 전역자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망을 구축하고 국가보훈처와 협조, 취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쪽,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 충원 후 남은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체복무제도로 1973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병역지정업체는 우수 중소·중견 기업 위주로 중점 선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맞춤 기능인력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채용박람회 개최하고 병역일터와 워크넷을 연계하여 병역지정업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충역 배정 인원을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안내 및 업체정보를 집중 홍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찬수 청장님 직접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 소관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위원님들 또 각 부처 차관님 또 뒤에 배석한 관계관계서도, 이렇게 함께 합동으로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그걸 함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청년문제, 부처마다 다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절실함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청년미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에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챙기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보고한 내용 가지고 일자리가 잘 될까 하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공직생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보고 마이크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보고를 하고 싶은 사람의 내용과 보고를 받는 쪽의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의 미스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기재부 보고 듣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보고가 또 서로 안 맞는 게 좀 있고요, 아직도 칸막이가 많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당장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돼서 1월 달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고민할까,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열거해서 말씀을 하니까 나름대로 고생은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효율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각 부처마다 일자리가 다 공통이에요. 보건복지부도,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복지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보고하고 싶은 내용을 보고하는 거와 저희가 듣고 싶은 내용이 서로 안 맞는데 굳이 말씀한다면 보고를 통해서 상대방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보다 상대방이 될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맞춰 주는 게……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슨 시책을 하겠다 열거해서 추진하지만 청년들이 공감 못 하는 것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뭘 원하는가 그걸 맞춰 주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간사 위원들과 합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시간은 종전에 해 오던 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상대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감사합니다.

연수갑 출신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청년들의 고달픔이 깊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년세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또 주거 문제, 취업문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연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또 출산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제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 정부, 과거 정부까지 전체가 같이 언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이게 정말 특정한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전 부처가 또 여와 야가 그리고 모든 정부가 합쳐서 꼭 해결해야 될 국가적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인해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국토부차관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지옥고'라고 들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옥고는 원래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단어가 지하,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을 합친 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세대의 주거빈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옥고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만 20세~34세 청년이 가장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적으로 29만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11.3%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또한 지하와 옥탑에 사는 이들과 주택을 제외한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빈곤 총량 합계는 총 45만 가구로 전체의 17.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37.2%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의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주거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유독 청년 주거빈곤율만큼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차관님께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박찬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율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은 절대적인 양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PPT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PPT 없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제공한 95년~2015년 주거빈곤율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95년도에 590만여 가구였던 전국의 주거빈민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5년도에는 227만여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서울의 청년 1인가구 중 주거 빈곤에 빠져 있는 가구는 1995년 12만 가구에서 2000년에 7만 2000가구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이후 꾸준히 늘어나서 2015년도에는 2배에 달하는 14만 7000여 가구로 주거빈곤층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PPT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보게 되면 한 1.5평 남짓 되고 있는 고시원의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 1.5평 정도 되는 곳에 침대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옷가지도 제대로 정비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공간이지요. 누워 있게 되면 제대로 발을 펴지 못하는 상황입니

다.

원래 고시원은 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요새는 수험생이 아닌 청년들이 이한 평 남짓한 방에서 삶의 동지를 틀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도, 비정규직으로 생활비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간신히 발을 뻗어서 잘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몇 년씩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차관님, 고시원 생활 한번 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가 봤습니다.

○박찬대 위원 2017년 8월 아시아경제 한 기사에서 보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두 평도 안 되는 좁은 고시원 방에 사는데 침대가 있긴 있어도 다리를 겨우 펼 수 있을 정도이고 방음도 안 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나 화장실도 떨어져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시원과 옥탑방, 반지하와 같은 지옥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주거난민’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4700개였던 고시원 수가 올해는 1만 1800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고시원의 수가 2.5배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청년의 현실적인 주거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청년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박찬대 위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중에서 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한 13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관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필요해서 개선해 나갈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이 공급을 해 왔고, 물론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연 7000호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대폭 확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얻은 경험으로는 임대주택의 양적 확충보다 필요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 또는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위주로 해야지 이게 신혼부부나 아니면 중장년층처럼 외곽으로 나가서 하게 되면 청년층에서는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된 물량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선호되는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큰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지금 민간 임대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양등하는 임차료 이런 부분들을 잡고 안정화 유도를 시켜 나가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임대주택 보증금이 최대 45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월평균 소득이 68만 원인 것을 고려하게 되면 이 또한 매우 부담이 큰 액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높은 임대료가 청년 주택정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만 청년들의 소득 사정도 고려한 합리적인 임대료도 책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임대료 책정의 경우에도 시세의 30~85%까지 주택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화시켜 주는 그런 식의 시책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삶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책임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찬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차관도 여러 가지 답변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해 보니까 특위가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나중에 끝나 버리니까 여기서 답변하고 조치하겠다는 후속조치가 그 뒤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실천되고 후속조치가 되는지 특위 끝나기 전에, 마지막 종료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구체화해서 그것을 좀 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병무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예, 병무청장입니다.

○김해영 위원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사회복지요원 기준을 완화하였지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기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지금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기자가 2015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기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소집 인원은 지금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소집 대기자가 9만 5000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예, 거기 현재 대학 재학생들 또 본인이 입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을 빼면 한 5만 8000명 정도가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요원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중에서도 소집 적체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청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의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겠습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역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병역신체검사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무요원이 증가될 것을 예측을 못 하고 3년 전에 그렇게 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무요원이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대기자가 4년을 대기하면 면제를 해 줬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3년으로 고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기능요원을 늘리는 등 수요를 확대하고 있고 또 신체검사규칙과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할 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적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국토교통부차관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올해 6월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게 청년들에게 호응이 많이 예상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이 지금 유사한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또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설계를 하게 됐고 많이들 호응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데 가입 대상이 만 29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지금 정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만 29세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 하더라도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나 하도급 고용자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당초 이게 원래

근로소득자로 국한하게 된 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형평을 서로 맞춘 것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상이 보다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악용될 우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정교하게 소득 증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 현재 저희가 관계기관과 같이 TF를 구성을 해서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상품 출시 전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혜택 볼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개선 방안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에는 교육부 기초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기초실장 김영철입니다.

○**김해영 위원** 교육부에서 2015년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개선안이기보다는 3개 대학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 분할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19.8%, 카드 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이 8.9%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현재 이것과 관련하여 법안도 계류 중에 있고요. 물론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관련 법안이 임기 만료로 해 가지고 자동 폐기된 것도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운 점을 상당 부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서 기숙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든가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남은 잔액 환불 처리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 행정적 부담이 많다고 하는 등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있겠지만 학기 초에 기숙사비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한 1분 정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해영 위원** 병무청장님, 오늘 이렇게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쭙보려고 그러는데요.

참전군인들 전사했을 때 유족들에게 전사 통지는 지금 국방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병무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어느 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국방부에서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김해영 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면 6·25 때 참전했다가 행방불명 처리된 1만 8000명이 예전에 전사자로 처리됐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예.

○**김해영 위원** 그런데 유족들에게 그게 통지가 안 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국방부에서 통지의무가 있는데 통지를 안 한 겁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그 문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이것은 병무청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해 줘야 될지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병무청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병무청장님, 아까 여러 가지 보고 잘해 주셨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였습시다만 과거보다 병무행정이 많이 개선이 됐지요. 그런데도 청년들의 고민거리 중의 하나

가, 큰 부담이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정말 군대를 어떻게 병역을 풀해야 되는지 이게 늘 청년들의 머릿속에 있는 큰 짐이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청년들과 대화를 해서 청년들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국토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신보라 위원** 보시면 금융위에서 진행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청년들이 낸 월세보증금이 워낙 낮아서 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졸업 후 재학 시보다 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취업준비기간에도 일정 정도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진단이 결국 해법으로,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주거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과 함께 이것을 취업준비기간과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일정 정도 제공을 해서 그러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신규적으로 19세~25세의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 인식에 비추어 본다면 정책 대상을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지금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보라 위원** 지원 가능하다.

그것을 지금 금융위에서 함께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지요. 정부 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합의된 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20대 후반도 지원이 가능한데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차원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을 넓힌 거지요.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 부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이 제가 알기로 한도가 2000만 원대이고 금리가 4.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과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약 3억 정도 실적이 있다고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용 대상자 규모는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지금 약 20건 정도 됐습니다.

○**신보라 위원**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유사 상품이 있고 그래서 신용 취급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보증금 규모가 작아서 월세 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이런 것에 비추어 보고 또 실태조사에 보면 제도 미인지가한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신보라 위원** 이 제도 미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민생경제특위 때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직접 방문해서 청년들을 만나서 정책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 그 경청한 내용을 받아서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제안했던 내용이 첫 번째로는 청

년·대학생 햇살론의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많이 강화를 해라는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그 햇살론의 대상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실상환은 1년 기준을 9개월 정도로 단축한 것 외에는 그렇게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조치였고요. 그다음에 햇살론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한 후속조치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특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위원들이 질의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 보완을 반드시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공감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낮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성실상환제에 대한 우대금리 같은 것들이 좀 더 미비돼 있는데 다음 회의까지 일단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음 전체 회의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좀 떠오른 이슈가 있어서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20~30대가 주로 가상화폐 투자자의 60%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열풍의 이면에는 다른 세대와 다른 디지털 시대에 접근하기 좋은 시대적 환경도 있고, 새로운 것과 유행에 민감한 것도 있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비해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20~30대가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20~30대의 어떤 심리 그리고 이런 성격과 무관하게 오히려 20~30대를 좀 철이 덜든 투기자, 투기꾼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정부가 이용자의 세대 간 특성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설정하지는 않고요, 20~30대가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렇게 세대 간의 특징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가상통화 거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용자의 특성들은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30대라고 그래서 세대 간의 그런 특성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위험이 많이 수반된 거래기 때문에 걱정하게 자기 책임하에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속 하고…… 절대 20~30대를 아직 미성숙하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신보라 위원 금융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올바른 시장질서를 유도해 갈 수 있는 책임 그리고 국민들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교육,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금융위가 2016년도 11월에 가상화폐 TF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도화될 방안을 좀 찾았다면, 그래서 능동적으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였다면 지금의 과열과 혼란은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일각에서 나온 얘기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이제는 가상계좌를 새롭게 만들려면 소득과 직업까지 모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 없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아예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정부 정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방침은 실명확인 입출금시스템을 지금 정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명확인 입출금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좌관리를 은행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보면 계좌 확인이나 이런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런 기준들이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이나 이런 걸로 자격 제한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금세탁방지 책무를 은행들이 훨씬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계좌 이용자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말씀한 대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논란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궁금한 그런 것도 좀 포함해 달라 아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12시가 됐습니다만 이 질의를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렇게……

○김중로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명수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순서가 됐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김중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끝내는 줄 알고 오후에 제가 다른 일정이 너무 많아서……

○위원장 이명수 계속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죄송합니다.

총리실에서 안 나왔지요?

누가 나오셨어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많이 관련 있는데,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복잡하지요, 가상화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쪽과는 협의 중입니다.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전체 처·부가 다 관련되는 건데 특별하게 지금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 있어요. 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김중로 위원 60%가 청년세대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건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특별히 젊은이 아니다 그런 차원보다도 가상통화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청년들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청년특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60%가 20~30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일단 지난번에 정부 정책 12월 28일 발표할 때는 미성년자하고 외국인들 참여는 제한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건 결정이 됐고요.

일단 20~30대라고 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를 특화하는 어떤 정책을 한다기보다도 이 가상통화 거래 투자자 일반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처·부마다 다 명칭도 다르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증표’, 왜 이렇게 다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지금 기술이 태동을 해서 진화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 기술의 변화 방향도 다양하고, 나라별로 제도화도 상당히, 지금 지켜보는 나라도 있고 일찍 시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게 선진국에서는 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미리 예상을 해서 조치를 해 오고 있다면 왜 우리나라는 예상을 못 하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국조실에서 합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본래 제천화재 사건도 그렇고 일련의 사고들을 전부 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는 예상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전시스템상의 이런 것도 굉장히 분명히 문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인……

이번에 이것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원인과 이유가 확실하게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병무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해영 위원님이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 보충역이 지금 20만을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정책을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박탈감을 갖고, 취직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것 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국가가 왜 못 하는지……

지금 제천 사건도 그래요. 예상 못 하고 사고 일어나면 관계자 처벌하고 뭐하면…… 근본적으로 정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후에도 지금 화재사고가 계속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엇박자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총리실하고 청와대하고 또 안 맞아요. 다른 데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어떤 말을 믿고 국민은 따라가야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어제 국조실에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님.

○**김중로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물론 각 처·부가 다 해당되는데 병무청장님도 보충역 많아지는 것, 지금 병무청장님이 오셔 가지고는 이런 현상이 없고 정말 잘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병무청장님들이 이것을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 지금 2023년·25년 인구절벽이 됐을 때 병력수급이 굉장히 문제로 돼 있어요. 이것을 미리미리 연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후부 계획을 세워서 정책 입안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그때 가면 또 이런 비트코인이나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선진국들은 그런 것을 잘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병무청장님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있지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집총 거부’로 좀 바꿔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지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저희들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라고 부릅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을 국방부만 쓸 게 아니라 전 언론에도 좀 해서……

이게 어떻게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까?

지금 위안부도 그래요, 위안부도. 제가 어제 정책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위안부입니까?

어느 나라 군대한테 가서 성폭행을 당한 건데 위안부예요? 정부에서 이 개념 정립부터 해야 돼

요, 명칭부터.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개념부터 틀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많아요. 작전권 전환도 전환이 아니라 환수입니다.

그런 문자를 한 7개를 내서 국정감사 했는데도 정부가 도대체 고치지를 않아요.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어떻게 위안부입니까, 이게?

이것 양심적……

그러면 병역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에요? 어떻게 남북이 극한 대치돼 있고 안보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문자 자체도 통일이 안 되고 문제의식을 안 갖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병역 거부 이것 지금 국회 특위에서 헌법에 답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이 정권 전에는 병역 거부 이것 검토조차도 안 했던 건데 이것을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은근히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나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청장님, 최고 책임자니까 이것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정권의 입맛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공무원 늘린다고 그래서 하사관을 4000명 막 이렇게……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정신들을 안 차리고,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안보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 사람들이 하사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금을 20년, 30년 후에 받을 때 그 누적의 돈이라는 건 후손들이 다 짊어져요. 이게 과연 국방개혁이 맞느냐?

안행부에서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판을 만들어서, 이게 대통령님의 집무실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가요, 장차관님들은 뭐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병무청장님께 이것 당부합니다. 이것 확실하시라고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 포함해서 정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안보 문제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김중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손병석 국토부제1차관께 묻겠습니다.

LH 한국토지공사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 시행이 청년들은 전세 매물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그리고 그 복잡함 때문에 부동산중개인이나 아니면 집주인이 꺼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층이 전세로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니까 좋은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은 경험이 많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찾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찾고 그다음에 또 계약……

○위성곤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이 제도가 청년들이 건물을 물색해서 LH공사에 요청을 하면 L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를 하는 제도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집주인이,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위성곤 위원 그러면 부동산 포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뒤서 발굴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조금 달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직접 찾지 말고 오히려 주택뱅크 같은 걸 통해서 LH에서 선제적으로 전세물량을 확보하고 그걸 마이홈 포털 같은 데 올려 가지고, 청년층이 접근성이 높으니까……

○위성곤 위원 선호도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자기가 원하는 지역과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하면 물건이 뜨고 필요하면 LH에서 1 대 1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 계약 과정까지 풀로 공인중개사를 끼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도를 그렇게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공공지원주택을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 많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위성곤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평균 면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평균 면적이 따로…… 그건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에서 건설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별도의 평형은 되어 있지 않는데 행복주택이 보통 9평에서,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정도의 크기, 호당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지원임대주택도……

○**위성곤 위원** 청년들의 주거 가격만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면적 규모가 크다, 10평 미만 정도 되면 되는데 15평·18평형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하는 개념이 8년 임대예요. 8년이 지나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지요. 결국은 시장 내의 청년지원주택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이만큼 물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저는 이 제도가 장기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에서 50년 정도로 전환을 하고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임대주택의 총량이 워낙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의 설계는 그렇습니다. 전세임대라고 하는 것이 순환이 되면 그 물량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성곤 위원** 순환이라는 게 매해 이렇게…… 지금은 청년들에게 특별한 대책으로 6만 호를 공급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평시적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 내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그렇게 되었고……

○**위성곤 위원** 그러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이 매우 많지요? 그런데 시장 내의 비율은 여전히 적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이유는 왜예요? 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으로 전부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관련 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 지역 내의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두 번째로는 다가구주택이 일반적으로 30평이나 35평형일 텐데 그것을 3분의 1로 쪼개서 10평형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낸다면 이분들도 시장 참여를 통해서 도시재생도 활력화시키고 물량 공급도 확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든, 특히 도시재생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집주인 임대나 아니면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이나 유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수리나…… 그러니까 기존의 큰 주택을 쪼개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지금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금융위와 교육부에 묻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되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이 8학기 이후에는 이자를 납입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일반 학자금이고 취업조건부가 있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종류가 좀 다릅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 학자금인 경우는 8학기까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없는데 학기가 지나면, 보통 9학기·10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학자금 쪽은 교육

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그건 좀 살펴보고 위원님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취업 후 학자금처럼 제도 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학기 중에, 8학기가 넘어서 9학기나 10학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록하게 되면 이자금을 내고 있고요. 그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학자금에 따르는 대출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仁和 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부 기조실장님,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鄭仁和 위원** 취업을 못 하다 보니까 구직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그 숫자 아세요? 전체 청년이 차지하는 니트족 숫자?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아까 고용부에 통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鄭仁和 위원**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니트족이 취업 대상자입니까, 방치 대상자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저희들 쪽에는 학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저희들 창업도 하고 진학 관련된 건 하지만 취업과 관련되어서 니트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육 과정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니트족에 대해서 지금 취업 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야 할 대상인지 그조차도 말씀 못 하시면 그게 무슨 교육부 관료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우리 고용노동부차관님, 니트족이나 지금 그냥 쉬고 있는 청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니트족에는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의 개념이 높습니까, 니트족의 개념이 높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니트가 훨씬 높습니다.

○**鄭仁和 위원** 니트가 높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鄭仁和 위원** 전국적으로 봐서 니트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른바 OECD 기준으로 본다면, 니트라는 게 현재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鄭仁和 위원**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OECD 기준으로 본다면 16년도 현재가 177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鄭仁和 위원** 니트족이?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재수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학원 다닌다든지 공시생이라든지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통계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한 이른바 정의 2로 본다면 148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이 니트족이 기회가 주어지면 취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鄭仁和 위원** 소위 말해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니트족들은 사실은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하

지 못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구직정책, 소위 말해 취업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틀립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실망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체감실업률 할 때는 이른바 실망실업자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통계에 잡고 있거든요.

○**鄭仁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몇 명이나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렇게까지 세분화시켜 가지고 조사한 통계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냥 쉬고 있는 사람 숫자도 나옵니다. 2016년의 경우를 보면 20만 명 정도로 나와요. 그것 다시 한번 봐 보시고.

아까 업무보고를 죽 봤더니, 제가 전 부처를 다 봤어요. 한번 죽 훑어봤더니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는 니트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대책 자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정확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 니트족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트족의 숫자 증감 그다음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숫자 증감을 보면 경기가 악화됐을 때 이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이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취업 기회가 주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다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의사가 있고 의욕도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울 때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다 분명히 촉구를 했습니다. 니트족 그다음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통계를 내서 취업정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위원회가 한번 지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용보조지표 지금 몇 개까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세 가지 쓰고 있는데요. 보조지표가 가장 넓은 게 말씀하고 계신 이른바 시간 추가취업희망자들 플러스 당장 취업할 잠재경제활동인구……

○**鄭仁和 위원** 그러니까 고용보조지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3개 쓰고 있습니다. 추가취업희망자……

○**鄭仁和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보조지표 4개, 5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경제연구원 것을 한번 참조를 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화시키기가 어려우면 어쨌든 통계는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냥 쉬고 있음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포함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집계하는 방법들이 뭐 국제기준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마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통계청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사안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그냥 쉬고 있음 이런 대상자들이 중요한 정부 고용정책, 청년고용정책의 대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자, 알았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정부가 이 문제점이 많고 또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나 니트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鄭仁和 위원 이 사람들을 방치해 놓으면 갈수록 그냥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고 해가 갈수록 취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쉬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늙으로 인해서, 직업 없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해악을 끼칩니까? 결국은 사회보장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범죄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금융위원장님, 지금 청년들이 대부업체 대부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2금융권이 좀 늘어납니다.

○鄭仁和 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鄭仁和 위원 보세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주변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대책 필요성 충분히 알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본 위원이 오늘 그냥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또 니트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수 정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또 평소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의 염동열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6개 부처하고 병무청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선임이라 그럴까, 전체 컨트롤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여성가족부는 고용률이라든가 여성 단절, 금융위원회는 채무에 대한 것, 교육부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교통부는 주거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빈곤, 그리고 병무청은 군대, 이렇게 역할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정부 부처에서 이런 청년정책의 회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여서 적어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디자인하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청년 일자리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각 부처에.....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만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6개 부처하고 병무청까지 7개 부처가 왔는데 종합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셔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디자인한 적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염동열 위원 없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지금 청년 대학생 이쪽뿐만 아니고 청년 전체 프로그램은 청와대나 내각에서 조율하고 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거 몇 번 회의가 있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최근에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염동열 위원** 서너 차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염동열 위원** 거기 컨트롤타위는 어디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청와대 여러 수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7개 부처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진두지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위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총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어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고요.
 ○**염동열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조정실장이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사회조정실입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자꾸만 질책하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계획서를 보니까 각자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많은데 대상자인 청년들은 실제로 과연 이것을 얼마큼 알고 있겠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이 150가지 정도 되는데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열 가지도 몰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과연 이런 정책이 흡수가 된 것이냐, 그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가 군인을 가고 대학교를 나오고 채무가 있고 결혼을 하고 주거까지 과연 종합적으로 정부가 우리에게 이러한 정책이 가깝게 접근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위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를 하려면,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군대가 어떻게 채무가 어떻게 얘기해 봐야 종합적인 시너지를 갖지 않으면 청년 대책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는 지금 청년의 나이를 한 20대로 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주로 대학생들 많이……
 ○**염동열 위원** 고용노동부는 몇 살 정도로 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15세에서 29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염동열 위원** 29세로 보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염동열 위원** 국토교통부는 보니까 39세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39세 미만까지로……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청년 나이의 경계선을 과연 어떻게 둘 것이냐, 그리고 청년을 어떻게 타깃을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청소년이 청년으로 가는 나이의 타깃을 정해야 되고 대학생 타깃을 정해야 되고 대학교에도 취업하기 전까지의 청년층, 군대를 다녀왔을 때의 청년층, 결혼을 한 청년층 이것을 다 타깃별로 종합적으로 디자인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보게 되면 사각지대의 청년들은 177만 명 니트족처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면 청년들이 왜 니트족처럼 집에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두 부처가 좋은 정책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읽어 보고 나도 몰랐던 정책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동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컨트롤타위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칸막이 허무십시오. 적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교육부가 대학생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채무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국가가 한 청년에 대해서 일일이 디자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타깃별로 디자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쥐야 돼요. 저는 만약에 오늘 이런 정책을 A라고 하는 청년이, 니트족이 보게 되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꿈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칸막이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칸막이를 허세요. 그리고 청년은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를 뒤서 같이 함께 의논하세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적어도 국가가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맑은 정신과 건강한 정신과 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래도 정부가 내 앞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부처의 차관님들 또 뒤에 직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정책들, 우수한 두뇌들이 가지는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저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것이 현장에서의 접근이 어렵다. ‘내가 지금 실업자인데, 내가 군인 갔다 와서 지금 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니트족인데’ 이러한 청년들이 적어도 이런 정책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 비전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오늘 7개 부처에서 나온 청년정책을 묶어서 청년들에게 제시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절망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막대한 국가의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 부으면서 정작 청년들은…… 저는 많은 청년들 만나 봤습니다. 대화도 많이 해 보고요. 굉장히 암담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핑크빛 정책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보고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시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는 것은 사회 첫발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사회 첫발에 적어도 정부 정책이나 정부가 나를 계속해서 코디네이트해 준다, 따라

와 준다,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채무가 있을 때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 조절도 해 주고 교육부에서는 장학금도 주고 군대를 갔다 왔을 때는 일자리도 열어 주려 그러고 또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거에 대한 희망도 주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쏟아낼 수가 있다.

이거 예산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정책만 잘 디자인하고 이것을 잘 설계만 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청년의 나이서부터 또는 컨트롤타워 그리고 종합적인 청년 비전 정책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국무조정실에 전달을 하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동열 위원** 다음 위원회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일단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염동열 위원, 너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반영해 주셨다고 보고요.

기왕에 컨트롤타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총리실에서 우선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좁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일단 컨트롤타워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작년 5월 정도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하고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얘기를 해 왔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처음 얘기를 했을 때는 청와대 내지는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들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청년특위 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제가 그 이후로 최근에 다시 얘기를 해 보면 어딘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건 긍정적

으로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니까 청와대하고 국무조정실이랑 어떤 식으로 역할을 가져가야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인화 위원님께서 니트족의 숫자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건 우리가 청년실업률 9.9% 그리고 체감실업률 22%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42%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청년실업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실업률을 넘어서 청년들의 전체 생애주기 모든 면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고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니트족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고용 말고도 청년들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고용부에서 말씀하시는 니트족의 숫자, 아까 177만 명 148만 명 이 말씀도 하셨지만 고용부에서 얘기하는 숫자와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던 숫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숫자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만 통계청 발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쉬었음’ 통계 말씀하셨는데 청년 중에서 ‘쉬었음’이라고 나오는 게 33만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다 보니까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꼭 고용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니트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아까 차관님께서 OECD 통계를 가지고 177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전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통계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용노동부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나오는,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인데 정부에서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은 대기업 준

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이렇다 보니까 일자리 미스매치가 있다, 그게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도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 미스매치는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보면 IMF 이후로 산업구조 그리고 기업의 채용 형태, 특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 부분들인데 마치 이것을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 이게 저는 결과변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고 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부처에 범부처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교육부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 후반부 정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창업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학은 교육기관이지 창업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기업가정신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나중에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있는데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당장 나가서 창업을 하라는 식의 교육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창업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 창업 동아리가

결국은 창업선도대학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창업 동아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창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다른 부처에서도 우리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 교육부는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턴십을 포함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내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수·교원 창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연구원 창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학생들한테 ‘당장 나가서 창업해라’ 이것은 저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수** 김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각 부처에서 청년 미래 정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국토부차관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정유섭 위원** 제 지역구가 인천 부평인데요 수도권 서부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7호선, 그다음에 인천지하철 1호선이 다닙니다. 경인고속도로도 관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옛날 집들 다 부셔서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오신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20~30대예요. 그분들이 왜 부평에 왔느냐?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직장은 다 서울이고 인천 송도고

그래요.

사실 도시라는 것이 도시의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기능이. 자기 직장 있는 데 근처에 살아야 돼요. 외국 같으면 부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고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도시 안에서 살면서 밤에 도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시를 활성화시킬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밀려나고 나이 든 분들만 값비싼 주택에 사는 이런 저기인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 좀 도심지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다 밀려나오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들이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로 가격과 땅값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 양자를 잘 조화시켜 나가면서 그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래서 서민주택은 싸게 지어요, 모양을 저기하지 않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 하면서 또 항만 같은 데 재개발하면서 그런 데 서민주택 위주로 짓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정유섭 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위원님.

○**정유섭 위원** 청년들이 제일 많이 창업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통신판매하는 업입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그게 2016년에 전체 청년 창업 22만 6000개 중에서 16.4%인 3만 7000개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주로 창업하는 온라인 쇼핑몰 카드수수료가 오프라인 소매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3억 원 미만이면 0.8%, 매출이 3~5억 원이면 1.3%의 우대수수료인데 온라인 쇼핑몰은 3.6%예요. 그러면 청년 창업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 카드수수료를 신속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도 아시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결제대행업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라고 PG를 통해서 들

어오거든요. 그래서 PG가 그 밑에 있는 쇼핑몰들을 다 조합해서 대체로 되니까 대응으로 되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을 1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정유섭 위원 이게 3.6%는 너무 높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래서 위원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밑에 쇼핑몰들이 달려 있는데 이 쇼핑몰들이 국세청에 자기 정보를 주면, 개별적으로 쇼핑몰 자기 매출이 3억이나 5억에 해당되면 아까 말씀하신 0.8이나 1.3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정유섭 위원 한번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정유섭 위원 교육부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정유섭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저소득 가구 및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서 22만 원 정도로 낮은 기숙사비의 행복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는 곳 중에서 기숙사비 협의가 끝난 게 24곳 중에 15곳인데 기숙사비가 3%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학진흥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3% 올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어서 외주 용역을 주는 기숙사 운영 인력, 예를 들어서 경비·식당·청소 인력 인건비가 급증해서 대학들이 기숙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지금 현재 법안이 하나 계류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를 물가상승의 1.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신학기를 맞아서 기숙사비가 오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학과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이것 대학생들한테 좀 싸게 하려고 기숙사 만든 것이니까 기숙사비가 오르는 것도 교육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한테 본질적인 문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청년들이 영혼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일자리 찾고 싶다. 지금은 녀이 나가 가지고 영혼도 못 팔아요. 9.9%까지 청년실

업률이 오르고 실질 체감실업률은 22.7%……

물론 대통령께서 제1공약으로 말씀하신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에 강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도 하시고 또 공공일자리도 81만 개로 늘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실업이 줄지를 않아요. 이것 왜 그럴까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청년실업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위원님께서 표현하시기는 인위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공 부문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형태로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차관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리정치대학의 안 알강 교수팀이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고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0년간 분석한 겁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가 도리어 1.5배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이, 민간이 만드는 게 진짜 일자리라는 것이지요.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규제 3개 신설하면 67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법인세 낮춥니다.

그리고 일본, 법인세 20%까지 인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해 11월 기준의 유효구인배율이 1.56배고요.

마크롱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정책으로 실업률이 9.4%로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정책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다, 기업 친화적인 게 아니라 반기업 정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문제인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잘 아시는 바처럼. 일단 한계소비성

향이 높은 우리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충을 해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도 늘어나고 다시 소득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자는 것이고요.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최저임금 위반하면 형사처벌받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신용제재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강제하고 규제해서 이것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발표를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우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기업, 민간이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의 혁신성장이라는 틀을 통해서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최저임금 위반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일단 최저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저임금은 준수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 때 향후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즉 유죄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법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되고 개정된 법의 요건에 따라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국회에서 법 개정할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국민의당의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채이배 위원 제가 12월 21일 청년특위 회의 때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자료 현황을 좀 요청을 했더니 지금 행안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조실 등에서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어요.

작년 8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 방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 요건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고용부는 지자체 자체 사업의 성과 관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른 점검하셔서 파악하시고 8월 달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이배 위원 아까 김병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실업난 이 미스매칭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그것은 결과물이다, 원인이 뭐냐?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력, 고졸과 대졸 간의 임금 격차 이런 여러 가지 임금 격차들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용시장의 현황을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붐 세대라고 해서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둔 세대들이 대거 진입할 태세에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최악의 청년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좀 많이 가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게 2+1이지요. 2명 채용하면 1명 고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데 이게 2+1 식으로 해서 3의 배수로만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정부가 바꿨어요, 정책 내용을. 그래서 일단 3명 하고, 4명 5명 될 때는 0.33명씩의 임금을 지원하겠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렇습니다.

○채이배 위원 이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 대선 때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냈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기업 임금의 한 8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맞출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청년 취업자에게는 대기업의 80% 임금을 맞춰주면 이런 청년들의 실업난도 해결하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비슷한 정책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지원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기업에 간접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청년들의 임금이 오르지 안 오를지는 모를 일입니다.

예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년층에 대한 간접보조금 방식으로 가면 효과가 덜하다, 직접지원 방식이 더 낫다, 그게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방식인데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른바 2+1 사업들은 몇 가지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고용장려금 2+1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또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위원님도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의 직접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더 배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런데 제가 간접지원에 대해서 언급한 이 부분은 이게 재정이 그만큼 쓰이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 역시 직접지원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고,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됐는데 공무원 채용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지금까지 뽑았던 것을 갑자기, 15년 동안 뽑지 않았던 고용노동직렬을 갑자기

부활시키면서 거기에 공무원 가산점에 대해서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15년 동안 사문화됐던 직렬인데 갑자기 이것을 부활시키면서 유예기간 없이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혼란이, 그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고용노동 쪽 관련들은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고용노동직렬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직렬에는 변호사나 노무사뿐만 아니라 지금 상담사의 경우에도 7급은…… 1급은 5%·3%도 돼 있고, 5%가 돼 있는데……

○채이배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면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주든지 뭔가 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런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실행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재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이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직렬에 대해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관련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다음에 교육부차관님 오셨는데, 제가 앞서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연평균 취업준비 비용이 345만 원, 전문직은 480만 원, 공무원시험 준비하면 633만 원 든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문직보다 더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어학 교육이나 자격증 교육인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시험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원 수업을 듣는 거지요.

이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나 봤더니 대부분 59%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또 아르바이트해서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현재 EBS에서 자격증 그다음에 공무원, 취업·창업 교육 같은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온라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터넷으로 올리시지요. 이게 제가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EBS의 온라인 사이트 유료 콘텐츠 서비스 매출이 32억 원밖에 안 돼요, 이익은 1억 원에 불과하고.

저는 이러한 것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가가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 재정적인 부담도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분만.....

○위원장 이명수 예.

○채이배 위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순 대학에 대한 얘기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즉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으로 바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신 건지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는데 교육과 일자리 미스매치, 우리가 아까 학력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학력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취업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성을 빨리 발견하고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부분들 좀 같이 교육부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꼭 청년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이 평생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평생교육·재교육 시스템 마련하는 부분도 일자리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수 채이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민중당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부처 보고에 보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근로능력 있

는 청년 빈곤층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돼 있고요.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8%, 중증장애인이 20.8%로 돼 있습니다. 이 중증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김종훈 위원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서 제외돼 있다는 걸?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부처 협의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을 보건복지부에서 한 적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주로 저희 아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증장애인은 주로 보호 작업장이랄지 이런 데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고용부에서는 일자리.....

○김종훈 위원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사항과 관련해서, 기본권과 관련해서 고민을 안 하는데 어느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간.....

장애인들이 최근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꽤 긴 시간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보시지도 않으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기본권 신장하고 인권 신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려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님, 한번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김종훈 위원 최저임금에서 이것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90%.....

○김종훈 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김종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

요하다고 보십니까,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것 일정 부분 저희가 유지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금 현재는 작업능력이 일반인들의 한 90% 정도까지 있던 것들을 그것은 지나치게 과하다 해서 90% 미만의 경우는……

○**김종훈 위원** 최저임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하루에 세 끼 먹어도 되고 중증장애인들은 두 끼 먹어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위원님.

○**김종훈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국민 모두가, 누구나 어쨌든 간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을 확대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들지 않는다면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일단 취업이 돼야 임금이 지급될 텐데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사실은 똑같은 최저임금 적용됐을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것은 지금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김종훈 위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는데 중증장애인이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못 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연구할……

○**김종훈 위원**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훈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부분들을 어

떻게 책임질 것이냐의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셔야지요. 그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차관님, 심각하다고 다들 말씀하고 계시고 OECD 국가 기준으로 여러 개선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좀 심각해 보이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통계 작성 방식에 있어 가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전체 실업률이 9.9%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7%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2.7%가 맞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마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이게 알바생이라고 빠지고 취업이 안 돼 가지고 공부한다고 빠지고 또 일자리 구하지 않는다고 빠지고 이래저래 통계에서 다 빠져 9.9%, 그러면 어쨌든 이것 통계의 착시 현상만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떤지에 대해 실태를 제대로 하려면 통계가 제대로 나와야 각 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실업률 통계에 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준, 국제적으로 비교가 되는,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야말로 체감실업률, 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파악할 때는 저희들이 실업, 이른바 체감실업률 등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관련해서 앞으로 더 세밀하게 이 부분들을 좀 더, 어쨌든 간에 손봐야 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2018년 예산을 보면 예년에 비해 사실은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12% 증액을 했고 또 19조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것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니냐는 식이지요. 극복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들이 많아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국도 굉장히 실업률이 높고 어려울 때 블레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책을 내놨어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주주들에 대해 가지고 황재세를 매겨서 10조 원가량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걸 실업을 구제하는데 특단의 조치로 사용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금을 추가하는 것 외에 대규모 국채 발행도 저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민 못 해 볼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어쨌든 간에 한 50조 원씩 매년 국채를 발행했어요. 이것 다 어디에 썼습니까? 대부분 기업에 썼지 않습니까?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이 잘 돼 가지고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이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잘 안됐어요. 저는 직접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50조 이 문제를, 그 국채를 발행 못 할 이유가 있겠는가……

청년들의 미래가 없어요. 다들 여기 대책이나 고민들이나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 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용이 안 일어나니까 결혼도 못 하고 다 저출산에다, 이 문제 다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국가에 미래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지금 2017년이 해방 이후의 최저 출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300년 후의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300만 명도 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데 나라의 미래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 접근해야 된다, 어쨌

든 간에 아직도 이것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여겨지는데, 차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시다만 저희가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민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드리기는 쉽지 않은 차원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실효성이, 어떤 실효성이 나는 그것 할지 모르겠지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며칠 전에……

1분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주시지요.

○**위원장 이명수** 예.

○**김종훈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조카가 부모가 뭐라고 한다고, 일자리 못 구해 가지고 ‘너, 왜 집에서 놀고 있냐?’ 이야기해 가지고 목을 매달아 자살해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족들만의 이야기이고 주변에만 있는 얘기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청년실업률과 청년자살률이 높아 가고 있는데 나라의 대책이라는 것은 겨우 어쨌든 간에 청년고용률을 높여 보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청년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수** 김종훈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는 종료를 하고요.

다음은 서면질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채익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서면질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별도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찬 시간을 미루면서 늦게까지 이렇게 회의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혹여 우리가 여기서, 오늘 회의가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의견이 있으셨는데 정부에서는 이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보다 좀 절실하다고 그럴까요? 일상적인 것 말고,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뭘 해야 될 건가?

그동안에 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게 뭔가를 좀 가려서 보다 효과적인 또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부처에서 나와서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한 사항은 반드시 나중에 종합을 해서 다시 별도 조치 상황을, 어떻게 실천되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특위를 열어서 부처별로 청년정책에 관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 청년정책에 관한 소위 법률 개정 사항, 현황 이렇게 있는데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바뀌야 되겠다, 예산은 어차피 기재부가 있습니다만 이 특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내주시고, 지난번에 보고한 부처에서도 함께 그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앞으로 회의 일정하고 소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또 특위 자문위원 문제 그다음에 2월 달에 현장방문 또 공청회 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간사님들하고 논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애쓰신 위원님들과 부처 차관님들, 여러 관계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 병 관	김 중 훈	김 중 로	김 해 영
박 찬 대	신 보 라	염 동 열	위 성 곤
이 명 수	이 채 익	정 유 섭	정 인 화
채 이 배			

○청가 위원(4인)

강 효 상	권 칠 승	박 정	임 종 성
-------	-------	-----	-------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유 세 환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 상 윤
교육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철
고등교육정책실장	이 진 석
대학학술정책관	박 성 수
직업교육정책관	김 영 곤
교육안전정보국장	류 정 섭
보건복지부	
차 관	권 덕 철
정 책 기 획 관	진 병 왕
복 지 정 책 관	배 병 준
사회서비스정책관	곽 숙 영
인구아동정책관	이 강 호
고용노동부	
차 관	이 성 기
고 용 정 책 실 장	임 서 정
노동시장정책관	박 성 희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 덕 호
여성가족부	
차 관	이 숙 진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 기 순
여 성 정 책 국 장	이 건 정
청 소 년 정 책 관	조 진 우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손	병	석
주 택 정 책 관	김	홍	진
공공주택추진단장	진	현	환

병무청

청 장	기	찬	수
기 획 조 정 관	김	태	화
입 영 동 원 국 장	홍	승	미
사 회 복 무 국 장	권	병	태

금융위원회

부 위 원 장	김	용	범
기 획 조 정 관	김	정	각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최	준	우